

부모의 역량 강화를 통해 영유아의 행복권 보장해야

이영소장

국가의 흥망성쇠는 인적자원을 얼마나 잘 키워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과 육아, 보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육아를 위한 정부의 투자는 지난 10년 간 10배 넘게 늘어났고, 급기야는 낳기만 하면 정부가 키우겠다는 공약까지 내걸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행복한 임신과 출산,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국정과제의 주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 지원과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정책 뿐 아니라,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양육 지원, 0~5세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0~5세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은 지난 정부가 내걸었던 정부가 키워주겠다는 공약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부모의 불만과 요구만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정부가 재정투자를 늘리면 부모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잘 키울 것인가?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하면 영유아는 행복해질까? 자녀를 양육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 자신에게 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잘 키우려는 부모의 노력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합해진다면 영유아는 행복하게 자라날 것이다. 그러나 낳기만 하면 정부가 키워준다는 구호와 국가 완전책임제의 공약 하에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역량을 키우는 대신 기관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태를 야기하였고, 결과적으로 많은 영유아들이 하루종일 집이 아닌 기관에서 질서와 약속이라는 틀에 갇혀 엄마의



따뜻함과 집의 편안함을 그리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난 아이들을 얼마나 잘 길러내느냐의 문제이고,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이다.

정부가 나서서 부모의 양육을 지원해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로 인해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역량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모에 대한 재정 지원에 앞서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부모가 하루종일 아이를 기관에 맡기고 본인의 여가를 즐기며 정부에게 또 기관에게 교사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한 요구만 하도록 부추길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의 일차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부모교육을 통해 역량을 증진시켜 부모 스스로 양육의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부모교육 이수제라도 도입하여 모든 부모가 부모됨에 대한 역할과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스스로 자녀 양육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부모의 역량과 책임감에 기초하여 부모들이 서로 협조하여 양육을 분담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양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대여하여 큰 비용 없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할 때는 잠시 양육을 대신해줄 수 있는 기관 설립을 통해 부모의 양육을 지원해 준다면 영유아들이 부모들의 손길 하에서, 지역사회 성인들의 보호 하에서, 정부의 지원 하에서 보다 밝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